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중국 환율제재 법안, 미 하원 통과

□ 위안화 환율 절상을 억제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 속에 미 하원을 통과함.

- 동 법안의 지지자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중국의 환율정책 변화는 미국 경제의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폴 크루그먼(Paul Krugman)교수는 중국의 환율 정책으로 무역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향후 몇 년 내에 미국에서 1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으며,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동 법안으로 1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하원의 표결에 앞서 위안화의 환율 변동성을 확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 그러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상원과 백악관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 법안이 최종 발효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가 미국 경제에 큰 효용을 가져다주지 못할 경우, 별 다른 이득 없이 중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및 북한과 관련된 국제 정치·안보문제를 중국과 협의 중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보다는 유화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
- 하원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동 법안이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며, 목장주, 운송업자 등 주요 사업단체들도 동 법안이 미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며 반대함.
- 또한 위안화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절하되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절상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나라가 중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음.

(LA Times, 9/30)